

지원 대상을 바꾸는 30 조원을 왜 통화정책 확충이라 하나

무역금융과 신성장을 빼고 중소기업 전반과 지방을 넣는다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번 개편을 부문별 자금 배분을 그만두는 조치가 아니라 배분 기준을 바꾸는 조치로 본다. 수출과 신성장이라는 산업 기준이 빠지고 중소기업 전반과 소재지 기준이 들어온다. 한국은행이 은행에 정해 준 낮은 금리가 차주에게 얼마나 전달됐는지는 이번에도 확인할 공시가 없다.

01 · 확정된 사실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은 2026년 7월 23일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항목	값	비고
개편 발표	2026년 7월 23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신규 도입 프로그램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2027년 하반기
한도 증액 프로그램	「지방중소기업지원」	2027년 상반기
축소·폐지 프로그램	무역금융지원 · 신성장·일자리지원	단계적
총한도	30조원	2020.2 25조원에서 증액, 2023.12 의결 기준
7월 은행 기업대출	+7.7조원	전월 +5.1조원, 한국은행 2026.8.14

발표문은 개편의 방향을 두 가지로 적었다.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는 것과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027년 하반기에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용한다고 적었다.

2027년 상반기에는 「지방중소기업지원」 한도를 증액한다. 금융접근성이 낮은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이유다. 「무역금융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 발표문은 이 두 프로그램이 장기간 준재정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적었다. 개편이 끝나면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두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된다.

총한도는 2020년 2월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었고 2023년 12월 의결에서도 30조원이었다.

한국경제와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편에서도 30조원은 유지되고 현재 대출금리는 연 1.25%다. 같은 보도는 「지방중소기업지원」 한도가 2014년 이후 5조 9,000억원으로 고정돼 있었다고 전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이 제도에서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직접 돈을 주지는 않는다. 한국은행은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이 그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대출한다. 한국은행법 제 64조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1년 이내로 대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 28 조 제 3 호는 여신업무의 기준과 금리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도록 한다. 은행에 얼마를 어떤 금리로 공급할지까지가 법이 정한 업무다.

부문을 나누는 일은 그다음이다. 한국은행은 총한도를 프로그램별로 쪼개고, 프로그램마다 요건과 금리를 다르게 정한다. 어느 부문에 얼마를 배정하라고 직접 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 1 조는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정하고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한다. 제 4 조 제 1 항은 통화신용정책이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제 28 조 제 18 호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 대출·투자의 분야별 최고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한하는 권한이지 배정하는 권한은 아니다.

은행이 이 자금을 받으려는 이유는 조달비용이다. 시장에서 조달하는 값보다 싸다. 한도를 더 받으려면 한국은행이 정한 요건에 맞는 대출을 늘려야 한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분기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순증액을 평가해 한도를 배정한다. 평가가 좋은 은행에는 대출금리를 우대한다. 프로그램 이름이 바뀌면 은행이 찾는 차주도 바뀐다.

지원 대상은 그때그때의 정책 과제를 따라 바뀌어 왔다. 2015 년 3 월 한국은행은 무역금융·설비투자·지방중소기업 프로그램의 금리를 연 1.0%에서 0.75%로 내렸다. 나머지 프로그램은 연 0.5%였다. 2017 년 8 월과 2018 년 9 월에는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제도를 개편했다. 2020 년 2 월에는 총한도를 25 조원에서 30 조원으로 늘리고 증액분 5 조원 중 4 조원을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배정했다. 발표문이 두 프로그램을 준재정적 운영이라고 적은 것은 이 이력에 대한 평가다.

연구소는 이번 문구를 부문 선택을 그만둔다는 뜻으로 읽지 않는다. 새로 남는 두 프로그램도 대상이 중소기업이고, 그중 하나는 지방 소재라는 조건을 더 붙인다. 달라지는 것은 대상을 고르는 기준이다. 수출과 신성장이라는 산업 기준이 빠지고 중소기업 전반과 소재지 기준이 들어온다. 경기에 맞춰 규모를 조절하겠다는 설명이 배분을 그만둔다는 뜻은 아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이번 개편으로 조달 조건이 달라지는 쪽은 「무역금융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의 요건에 맞춰 저리 자금을 배정받아 온 중소기업이다. 수출입 거래로 자금이 필요한 기업, 신성장 분야나 고용 증가 요건으로 우대를 받아 온 기업이다. 두 프로그램의 축소는 2027 년부터 시작된다. 지금 이 요건으로 대출을 쓰는 기업에게는 예고된 축소다.

우대 폭은 기업마다 다르다. 1 억원을 빌린 기업의 금리가 1%포인트 높아진다고 하자. 연 이자는 100 만원 늘어난다. 10 억원이면 1,000 만원이다. 가정에 따른 산술 예시이고 발표 자료에 제시된 수치가 아니다. 실제 인상 폭은 은행이 그 기업에 매기는 금리에서 정해진다.

대출 약정서와 금리 안내에는 이 대출이 한국은행 자금으로 취급됐다는 사실이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은행에 정해 준 금리는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자금으로 취급된 대출에 차주가 부담한 금리를 프로그램별로 공시하는 자료는 연구소가 확인한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 프로그램이 없어져 금리가 오를 때 차주는 그 인상을 제도 변경이 아니라 자기 신용의 결과로 받아들여게 된다.

04 · 무엇이 안 막히는가

- 두 프로그램이 없어져도 부문을 고르는 일은 남는다. 새로 남는 두 프로그램 모두 대상이 중소기업이고, 그중 하나는 지방 소재라는 조건을 더 붙인다.

- 축소·폐지의 연도만 제시됐고 한도를 줄이는 폭과 시기는 발표문에 없다. 지금 이 요건으로 대출을 쓰는 기업이 언제 얼마나 조건이 달라지는지 알 수 없다. 만기가 먼저 오는 기업과 나중에 오는 기업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
- 「지방중소기업지원」의 증액 폭이 정해지지 않았다. 5 조 9,000 억원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총한도 30 조원 안에서 어느 프로그램의 몫을 줄여 채우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 한국은행이 은행에 공급한 금리와 은행이 중소기업에 매긴 금리의 차이를 프로그램별로 확인할 공시가 없다. 낮은 금리의 몫이 차주에게 얼마나 전달됐는지 검증할 방법이 남지 않는다.

05 · 지금 할 일

국민

-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고 있다면, 대출 약정서와 금리 안내에서 정책자금 취급 여부와 우대 항목을 확인한다. 적혀 있지 않으면 은행에 서면으로 요청한다.
- 무역금융이나 신성장·일자리 요건으로 우대를 받고 있다면 만기일과 연장 조건을 확인한다. 2027 년 이후의 조달 조건도 지금 은행에 확인해 둔다.
- 재무상태나 신용도가 나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고,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다.

금융회사

- 대출 금리 안내에 한국은행 자금으로 취급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인하분을 항목으로 표시한다.
- 프로그램 축소 일정이 확정되면 만기가 오기 전에 해당 차주에게 개별로 알린다.

당국

- 프로그램별 취급 실적과 함께, 그 자금으로 취급된 대출에 차주가 부담한 평균 금리를 공시한다.
- 축소·폐지 일정과 한도를 줄이는 폭을 확정 시점에 함께 밝힌다.

칼럼길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 「지방중소기업지원」의 증액 폭과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의 한도 배정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 로 가면 · 증액 폭이 크고 배정 기준이 소재지와 기업 규모 중심이면 수도권 밖 중소기업의 조달 조건이 나아진다. 수출·신성장 요건으로 우대받던 기업의 조건은 그만큼 나빠진다.

B 로 가면 · 증액 폭이 작고 배정 기준이 은행별 대출 순증액 평가에 치우치면 대출을 늘리기 쉬운 차주에게 자금이 배정된다. 금융접근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효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어디를 보면 아는가 · 2027 년 상반기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문에 「지방중소기업지원」의 증액 금액이 숫자로 적히는지,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의 배정 기준에 소재지 항목이 들어가는지

함께 읽을 것

란	편
금융제도	금리인하요구권 신용점수와 신용평가 금융감독 체계
금융상품	개인사업자 운전자금대출 개인사업자 시설자금대출

란	편
금융사건	가짜 수출서류로 은행에서 3 조원을 빌렸다 738 개 기업이 3 조 2,247 억원을 잃었다
피해 구제	금융회사에 민원 넣기 자료열람요구권 활용법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2026.7.23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편 발표. 원문 문구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확충",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1 차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2026.7.23 발표 원문 전제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4585
2027 년 하반기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신규 도입, 2027 년 상반기 「지방중소기업지원」 한도 증액, 「무역금융지원」·「신성장·일자리지원」 단계적 축소·폐지, 향후 2 개 프로그램 중심 운영	1 차	위 동일. 원문에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 전반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금융접근성이 낮은 지방 소재 중소기업", "장기간 존재정적으로 운영"이라는 표현이 있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4585
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 25 조원 → 30 조원 (증액 5 조원), 증액분 중 지방 소재 중소기업 4 조원	1 차	한국은행 2020.2.27 발표 원문 전제. 창업·일자리창출기업 약 1 조원(은행대출 기준 약 2 조원)도 함께 적혀 있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98048
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 30.0 조원 (‘23.12.1~’24.6.30 운용), 예비한도 9.0 조원	1 차	한국은행 2023.11.30 발표 원문 전제. 원문 문장 "금융통화위원회는 '23.12.1(금)~'24.6.30(일)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를 30.0 조원으로 운용하기로 의결"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5414
2015.4.1 시행 — 무역금융·설비투자·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대출금리 연 1.0% → 연 0.75% , 나머지 프로그램 연 0.5% 유지	1 차	한국은행 2015.3.26 발표 원문 전제. 한도 5 조원 증액(설비투자 4 조원, 기술형창업 2 조원)도 같은 자료에 있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41129
2017.8.10 신성장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방향의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	1 차	한국은행 2017.8.10 발표 원문 전제. 제목과 개편 취지 확인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67678
2018.9.20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개편, 2018.11.1 시행	1 차	한국은행 2018.9.20 발표 원문 전제. 지원대상 기업 확대 및 우대지원 강화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80859
2026 년 7 월 은행 기업대출 + 7.7 조원 (전월 + 5.1 조원)	1 차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2026 년 7 월 금융시장 동향」(2026.8.14) 원문 전제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5412
한국은행법 제 1 조 —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며, 통화신용정책 수행 시 금융안정에 유의	1 차	한국은행법 제 1 조 조문 원문 확인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47917&cseq=1164141
한국은행법 제 4 조 제 1 항 —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차	한국은행법 제 4 조 조문 원문 확인. 제 2 항은 시장기능 존중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47917&cseq=1164144
한국은행법 제 64 조 —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증권의	1 차	한국은행법 제 64 조 조문 원문 확인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47917&cseq=1164144

확인한 사실·숫자	등급	출처
재할인·할인·매매 및 1년 이내의 대출		hseq=47917&cseq=1164220
한국은행법 제 28 조 — 금융통화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제 3 호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또는 그 밖의 여신업무의 기준 및 이자율'과 제 18 호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이 포함된다	1 차	한국은행법 제 28 조 조문 원문 확인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47917&cseq=1164172
이번 개편에서도 총한도 30 조원 유지, 현재 적용 대출금리 연 1.25%	2 차	한국경제 2026.7.23 보도. 뉴스핌 2026.7.23 보도(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3001189)도 같은 수치를 전한다. 본문에 "한국경제와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을 명시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7231518i
「지방중소기업지원」 한도가 2014 년 이후 5 조 9,000 억원으로 고정	2 차	뉴스핌 2026.7.23 보도. 헤럴드경제·한국경제 보도도 같은 수치를 전한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3001189
분기별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순증액을 평가해 한도를 배정하고 평가가 좋은 기관에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운영 방식	2 차	헤럴드경제 2026.7.23 보도. 본문에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을 명시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17568
1 억원 차이 기업의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연 이자 100 만원 증가, 10 억원이면 1,000 만원 증가	파생	1 억원 × 1%p = 100 만원, 10 억원 × 1%p = 1,000 만원. 가정에 따른 산술 예시이며 발표 자료에 제시된 수치가 아니다

본문 분량	검증 항목	1 차 자료	추적 예정
2,543 자	16 건	12 건 (75%)	9 개월 뒤

추적할 때 볼 것 · 2027 년 상반기 금융통화위원회 의결문에 「지방중소기업지원」 증액 금액이 숫자로 적혔는가. 「무역금융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의 한도를 줄이는 폭과 시기가 제시됐는가. 프로그램별 취급 실적과 차주 부담 금리를 함께 공시하는 자료가 생겼는가

정정 없음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과 견해이며, 어떤 감독기관이나 금융회사의 공식 입장도 아닙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가입·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문의 사실관계와 수치는 발행일 기준이며, 근거는 위 검증표에 밝힌 자료에 한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